

# 『인증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는가?



허 경 옥 교수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전열기 과열로 인한 화재, 압력밥솥 폭발,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 폭발사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입완구 및 육아용품의 오작동, 소비자의 사용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피해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데 사전적 안전관리정책으로써 인허가제도, 품질인증제도, 자율안전제도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이중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KS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여 왔고 KS마크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을 일컬어 “저 사람은 KS” 라고 부르기도 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정 요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 중 의무 인증은 안전이나 보건 등을 위해 기업이 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70개가 있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4년 8월 5일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5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139개 임의 인증 가운데 41개(29.5%)를 2017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는 제품, 서비스 등의 유사·중복 인증을 없앤다는 취지이다. 예컨대 우수화물운수업체, 우수물류창고업체,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등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수산물과 관련한 8개 인증은 우수수산물 인증으로 통합한다.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비롯해 실효성 없는 12개 인증을 없앤다. 한편 품질경영체계(ISO 9001), 환경경영체계(ISO 14001) 등 6개 인증은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837개 인증 기준을 국가표준(KS)과 일치시켜 472개 품목에 대해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 심사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 인증절차를 2단계로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평균 70일 정도 걸리는 기간을 3분의 1



20일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인증기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KS인증 일치화 여부 및 유사·중복성을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

게다가 정부는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막기 위해 모든 인증 도입 때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운용하는 인증제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존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제도의 실효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올해 말 국가인증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인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0년 조사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인증 취득과 유지 비용으로 연평균 3천230만원을 쓰는 등 인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GAP 인증의 경우 기존 '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신청' '인증심사' 3단계로 처리하던 인증심사절차를 '인증심사'로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126일에서 84일 단축한 42일로 줄인다.

지금까지 정부의 금번 인증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아직도 인증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인증제도에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인증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증제도의 개념 및 유형

인증제도는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제품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능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규정된 기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국내에는 140여개 인증제도, 730여개 인증·시험기관, 1만2천여 명의 심사인력, 210만 건에 이르는 인증 건수가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2년에 약 5.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증제도는 일반적으로 강제성과 임의성에 따른 분류 기준을 사용하나 목적과 대상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 2. 인증제도의 분류

### 1) 강제성과 임의성에 따른 분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인증제도는 법령 등에 의하여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강제인증, 법령에 규정이 있더라도 인증대상을 정하여 의무화하지 않는 법정임의인증으로 구분한다.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 중인 임의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20개, 국토교통부 19개, 농림축산식품부 17개, 해양수산부 16개, 산림청 10개 등 25개 부처 139개다. 산업육성, 환경보호 등의 명목으로 생겨난 임의 인증은 2000년 32개에 불과했으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2010년 98개에서 올해는 139개까지 증가했다. 민간인증은 인증부여 방식에 따라 인증마크 부여, 상(賞) 부여로 구분한다. 민간인증은 법적 근거가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제도이다.

### 2) 목적에 따른 분류

인증의 목적에 따라 인증을 분류하면 첫째, 구조·치수·단위의 표준화 등 물리적 통일화, 둘째, 시험·측정·성능이나 시험·측정방법의 표준화, 셋째, 품질 또는 안전 인증과 같이 일정 범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 넷째, 디자인이나 신기술 인증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경우이다.

### 3) 대상에 따른 분류

과거 인증은 주로 제품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사업주체, 체계(system), 제조방법 또는 기술, 사용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확대되고 있다.

## 3. 법정인증제도

현재 법정인증제도(법정강제, 법정임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에서 총 64종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인증은 시험기관, 사업자단체 및 지자체 등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약 80여개 이상의 종류가 운영된다.

〈 인증제도 유형 〉

구분		내용	방식
법정인증제도	법정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서 규정한 인증으로 인증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능</li> <li>• 공산품안전인증제도 등 8개 부처에서 총 19종류 운영</li> </ul>	인증마크 부여
	법정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에 따라 권장하는 인증으로 우선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li> <li>• 환경표지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등 11개 부처에서 총 45종류 운영</li> </ul>	
민간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근거 없이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인된 기관에서 민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li> <li>• Q마크, 서비스품질인증 등 약 60여 종류 운영</li> </ul>	상(賞)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근거 없이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민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li> <li>• 국가고객만족도(NCS) 등 약 20여 종류 운영</li> </ul>	

### 법정강제인증

법정강제인증은 주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품질, 환경, 보건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요사항은 첫째, 대상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상의 최소 요건을 고시로 규정, 둘째, 제품이 당해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며, 당해 기준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유통, 사용상의 제한 있음, 셋째, 각 부처에서 형식승인, 안전검사, 성능검사, 적합검사 등의 방식으로 운영이다.

이외에도 법정임의인증은 주로 품질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환경, 보건, 신기술, 에너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포함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구속력은 없다. 제품과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인해 줌으로써 널리 유통 사용되도록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민간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상(賞) 형태로 주기도 한다.



## 4. 민간인증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인증제도는 총 41개로 인증 부여 방식에 따라 인증마크 부여 방식이 32개, 상(賞) 부여 방식이 9개로 나누어진다. 민간인증의 종류는 국가통합인증마크사이트 [www.kats.go.kr](http://www.kats.go.kr), 한국생산성본부사이트 [www.brand.or.kr](http://www.brand.or.kr), 브랜드스탁 [www.brandstock.co.kr](http://www.brandstock.co.kr), 프리미엄브랜드지수 [ks-pbi.ksa.or.kr](http://ks-pbi.ksa.or.kr),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진단평가사이트 [certify.kmac.co.kr](http://certify.kmac.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민간자율인증이 활성화된 6개 인증들은 민간으로 전환된다. 품질경영체계(ISO9001), 환경경영체계(ISO14001) 인증 등이 대상이다.

## 5. 인증마크 부여방식

인증마크 부여방식은 대부분 인증시험 자격을 갖춘 협회, 기술원, 연구원 등에서 인증 시험을 거쳐 인증마크를 주는 형태로 제도상 혜택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 6곳에서 인증시험을 담당하는 품질보증제도(Q마크), 한국표준협회의 LOHAS인증제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제품안전성제도(S마크) 등이 있다. 제도적 혜택을 살펴보면, 품질보증제도(Q마크)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인증함으로써 상품의 고급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임의표시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 시 유리한 조건 부여와 법으로 규제하는 각종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업무 우선지원, 연구원의 각종 시험수수료 감면혜택, 시험검사설비 사용계약 시 감면혜택 등 각종 제도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賞)부여 방식은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제도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 소비자보호, 고객만족과 같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형태로 활용한다. 주로 지표별 점수 또는 지수를 기반으로 한 점수제 형태로 실제 많은 기업들이 광고 등에 적극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분 및 고객접점 부분,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등이 이에 속한다. 상(賞)을 통한 이미지 제고의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로 소구하기 위해 인증을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보호, 고객만족, 서비스우수기업 등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인증제도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증제도는 하나의 소비자정보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과 구매행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인증제도의 마크나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기업에게는 최소한의 품질과 특성을 갖추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인증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이해는 인증제도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남게 된다.